

# 주한미군의 미시적 지정학\*

-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사회의 범죄 및 환경 문제의 발생과 해결방안 -

최 병 두\*\*

## Micro-Geopolitics against the U.S. Forces in S. Korea: Local Problems Caused by the U.S. Military Bases and Strategies for their Resolution

Byung-Doo Choi\*\*

**요약** : 그 동안 미군기지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미시적 문제는 거시-지정학적 관점에서 국가안보와 동북아 평화를 이유로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통치체제가 민주화되고 시민사회의 정치적 담론이 활성화되면서, 이 문제들은 지역사회 나아가 전국적으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미군 문제들에 접근하기 위하여 미시-지정학적 관점이 주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논문은 미군 주둔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사회적 범죄와 환경오염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미시-지정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최근 정치지리학에서 지역사회에서 유발되는 문제와 생활정치 등에 초점을 두는 미시-비판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미군 기지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 유형으로서 범죄와 환경오염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구시 남구의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주민의식을 분석하였으며, 끝으로 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주요 대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 미시지정학, 주한미군, 미군 범죄, 미군기지구변 환경문제

**Abstract** : Problems caused by the U.S. military bases have attracted little attention until recently due to the national security of S.Korea and the peace of North-Eastern Asia, emphasized from the perspective of macro-geopolitics. However, since the political regime has been democratized and political discourses have been liberalized from the 1990s, those problems become a nation-widely serious social issue, though they have been brought about on the local areas. Thus, it can be suggested that micro-geopolitics is highly relevant and significant in approaching the local problems caused by the U.S. military bases, and ultimately resolving the macro-geopolitical problem of longstanding unfair relations in the SOFA and the withdrawal of U.S. troops. This paper aims to consider local problems caused by the U.S. military bases and resolving strategies from the perspective of micro-geopolitics. First of all, it discusses some significance of the micro-geopolitical perspective, as it has been recently emphasized in political geography in considering local problems and politics of life on the basis of place, then looks on empirically crimin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caused by the U.S. military bases, analyses the questionnaire data on the perception of local dwellers around the military camps in Nam-gu Daegu, and finally suggests strategies to resolve those problems, which level up from the micro to the macro-scale of geopolitics.

**Key words** : Micro-geopolitics, The U.S. Forces in S.Korea, U.S. military crimes, Environmental Problems around the U.S. military bases.

### 1. 서론

2차 대전 이후 세계정치를 특징지었던 냉전의 종식은 전 세계적으로 (거시적)지정학의 종언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구소련의 몰락과 동구권의 민주화 그리고 중국의 개방과 개혁은 기존의 대립적 정치 이데올로기의 포기와 군사적 적대 관계의 해체를 분명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계정치는 여전히 각 국가들의 물리적 위치와 공간적 관계, 그리고 영토의 확장이나 이에 부존된 자원의 확보를 둘러싼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정학적 접근이 여전히 매우 유의한 것처럼 보인다. 예로, 2001년의 9.11 테러와 이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및 이라크 전쟁은 아직 세계정치가 지정학적 구조와 공간환경적 관계에 의해 규정

\* 이 논문은 2002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지리교육전공 교수(Professor, Major in Geography Education, Daegu Univ.)(bdchoi@daegu.ac.kr)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최병두, 2002b).

한반도에서도 남·북간 긴장관계는 지속되고 있으며, 김대중 정권의 이른바 햇볕정책이 거시-지정학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2002년 6월 미군 장갑차에 의해 2명의 여중생이 무참히 희생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동안 사회적 여론뿐만 아니라 학술적 담론의 주제로서도 흔히 금기시 되어왔던 주한 미군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되게 되었다. 특히 미군 장갑차의 운전병들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내려진 이후, 이에 항의하여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촛불시위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정치라는 점에서 미시적 지정학의 한 유형으로 이해된다. 중·고등학생부터 장·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참가하여 촛불의 바다를 이루었던 이 시위는 한국인에 대한 차별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던 범죄처리 과정과 관련하여 미국 대통령의 사과 및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미시-지정학적 대응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일단 접어두고라도, 주요 함의들 가운데 하나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불가능했던 미군 반대 담론과 행동이 미시적 차원에서 이제는 명확히 표현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미시지정학적 저항 담론과 행동은 미군에 의한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반전운동으로 이어졌다. 미군기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나 반감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들의 저항 및 반대 운동은 물론 단지 최근 사태의 영향만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기보다는 그 동안 누적되어온 문제들이 어떤 계기를 맞아서 폭발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사실 미군 주둔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대표적으로 미군에 의한 사회적 범죄, 미군기지 영내·외 환경오염, 그리고 미군이 차지하고 있는 공여지로 인한 문제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측면에서 미군 주둔의 정당성에 관한 이데올로기는 미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 문제들에 대한 논의조차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이후에 와서야 다소 완화되었

으며, 피해 주민들이나 관심을 가진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사회적 범죄와 환경오염 등을 폭로하고 대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들에 대해 구태의연하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군 주둔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사회적 범죄와 환경오염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사회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미시 지정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최근 지정학적 연구에서 지역사회에서 유발되는 문제와 생활정치 등에 초점을 두는 미시-비판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미군 기지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 유형으로서 범죄와 환경오염의 실태를 살펴보고, 대구시 남구의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주요 대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미군 주둔에 대한 미시-지정학적 접근

### 1) 미시-비판적 지정학의 발달

전통적 의미에서 지정학은 공간에서 전개되는 국제정치 주체들의 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된다. 19세기말 라첼(Ratzel) 등의 정치지리학에 영향을 받았던 독일 지정학자들은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조직과 구조에 관한 지식과 이를 응용한 전략의 개발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2차 대전 직전 지정학은 현실의 정치적 상황에 종속되어 국제정치에서의 패권과 공간에서의 힘의 실행에 관한 전략적 학문이 되었다. 사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국제정치는 세계적 힘의 관계에 관한 이러한 지정학적 이해에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기초했다고 할 수 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 이른바 냉전체제 하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냉전체제의 해체 이후 이와 같은 지정학적 이해는 의미를 상실한 것처럼 보였다. 왜냐하면, 미국과 구소련을 기본 대립축으로 형성되었던 이데올로기적 및 군사적

적대관계가 해소되면서, 공간이나 영토를 둘러싼 정치논리보다는 경제논리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냉전체제는 비록 해소되었다고 할지라도, 코소보사태에서 이라크전쟁에 이르기까지 최근의 사례들에서 보면 정치적 갈등은 지역적으로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 개발 및 보전이나 환경안보에 관한 새로운 지정학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임덕순, 1999; 이영형, 1997; 이대희, 2002).

지정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은 이와 같이 국제정치에서 새롭게 이슈화된 주제들의 이해라는 점에서 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접근방법과 새로운 연구 주제의 탐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Agnew, 1983, 1998; O'Tuathail, 1996, 2000; Dodds, 2000, 2001). 즉, 최근 지정학적 연구에서, 세계화와 지방화,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등의 개념들을 중심으로 공간과 권력을 이해하고자 하는 새로운 관점이 부각되고 있다. 새로운 지정학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요 주제들은 세계화와 새로운 국제관계, 지역적 경계와 영토적 갈등뿐만 아니라 자원 갈등과 생태적 정치, 장소와 정체성의 정치, 지리적 지식의 동원 및 정치적 힘의 상징적 재현, 지역 사회에서의 갈등과 새로운 사회운동 등을 포함한다(Reuber, 2000). 이러한 주제들 가운데 예로 새로운 사회운동에 관한 연구는 오늘날 새롭게 등장하는 지역 사회운동들이 국가 권력 및 국제적 체도들에 도전하면서 세계적, 지역적, 지방적 규모에서 정치적 공동체의 재구성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Dalby, 1992, 277; Routledge, 1996).

이와 같이 최근의 지정학은 기존의 전략적-거시적 지정학이 아니라 비판적-미시적 지정학을 지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일상생활 또는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힘관계와 이의 공간적 배경에 관한 연구를 강조하는 미시적 지정학은 영토를 둘러싼 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 또는 국제정치의 공간환경적 측면에 주로 관심을 두었던 기존 지정학의 연구 주제를 다양화시키고 또한 연구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미시적 지정학은 지역사회 또는 장소가 어떻게 특정한 '저항의 지세'(terrain of resistance)를 형성하며, 지역 사회에서 함께 겪게 되는 특정한 경험을 통해 비판적 의식과 대안적 지식을 공유하게 되는 과정과

이에 기초한 실천적 운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Routledge, 1996). 물론 비판적 지정학은 이러한 미시적 규모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국제 정치에 관한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비판적 지정학은 연구 주제를 거시적/미시적 규모를 이원화하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 연구주제들을 거시적인 사회정치적 배경과 관련시켜서 이해하고자 한다. 예로, 비판적 지정학은 지역사회운동에서 나타나는 '저항의 국지적 맥락이 어떻게 세계적 과정과 상호 작용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자 한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 세계에서 거시적 지정학은 국제정치의 결정적인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자본의 세계화와 경제적 신자유주의를 암묵적으로 촉진시키고 있는 초국적 자본과 초강대국(들)은 국민국가의 역할과 경계를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함에 따라, 거시적 지정학은 국민국가들 간의 갈등이나 대립을 능가하여 세계적 규모의 지정학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화 과정은 또한 동시에 지방화과정을 동반함에 따라, 개별 도시나 지역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바꾸어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지정학의 구체적 현상들은 국지적 장소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지정학은 세계적 규모로 확대되는 한편, 국지적 규모로 초점을 옮겨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지적 규모에서 이루어지는 지정학을 '미시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항상 '거시적' 차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진정한 의미의 미시적 지정학은 포스트모던 사회이론이나 철학에서 강조하는 정체성이나 장소 그리고 생활의 정치로 표현될 수 있지만, 항상 거시적인 정치경제적 맥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미시적 지정학은 포스트모던 사회이론과 정치경제학의 결합을 통해 체계화될 수 있다.

이러한 미시적 지정학은 학문적으로 사실 '비판적 지정학'(critical geopolitics)으로서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포스트모던 사회이론(또는 탈구조주의)과 정치경제학의 영향<sup>1)</sup>하에서 발전하고 있는 비판적 지정학은 군사적 상황이나 전략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보다 정체성의 정치, 지역사회의 시민권리, 지권력(geo-power) 등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진다(Dodds and Sidaway, 1994; Dodds, 2001). 예로,

기존의 지정학에서 제기되었던 전략과 침략에 관한 의문은 지리적 지식이 정치적 조직에 어떻게 이용되는가에 관한 질문으로 대체된다. 즉, 맥킨더의 지정학적 세계관에 기초한 지정학은 '지권력'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구명하기 위한 연구로 전환되고 있다. 오튜테일(O'Tuathail, 1996)은 비판적 지정학을 지리학적 담론이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방법에 관한 정치를 폭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했다. 이와 유사하게, 지식의 불균등한 생산과 교환에 관한 연구에서 슬레이트(Slater, 1999)는 상이한 지정학적 상상력이 어떻게 구성되며 서로 경쟁적으로 정치적 지형을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고찰한다. 또 다른 예로 지역사회운동에 관한 연구에서 로트리지(Routledge, 1996, 509)에 따르면, 비판적 지정학은 지역 "사회운동이 어떻게 헤게모니, 동의 및 권력에 관한 국가중심적 사고에 도전하며, 국가에 의한 '정치'의 식민화에 대항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비판적 지정학은 외부 권력에 대항하는 힘으로서 사회운동이 이루어지는 '저항의 지형'에 참여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요약하면, 1980년대 말 세계화/지방화 과정의 전개 또는 포스트모던 사회로의 전환을 배경으로 기존의 지정학적 전통에 대한 비판으로 새로운 지정학이 발달하게 되었다.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지정학의 특성으로, 첫째 다양한 주제들이 '지정학'의 관점에서 이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정학의 연구 주제들이 크게 확대되었다. 대표적인 주제들로, 자원갈등과 생태정치, 지식/권력과 담론의 역할, 장소와 정체성, 새로운 지역사회운동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주제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새로운 지정학은 거시적 차원뿐만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물론 새로운 지정학은 미시적/거시적 차원의 이분법이 아니라 거시적 배경에서 미시적 현상들이 발생하며 또한 이러한 미시적 현상을 통해 거시적 배경이 재구조화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셋째, 새로운 지정학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적 주체들의 전략적 지식이 아니라 권력에 저항하는 비판적 지식과 실천으로 이해된다. 즉 새로운 지정학은 지정학적 침략이나 통제를 위한 힘관계가 아니

라 지정학적 실천 현장의 참여자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새로운 지정학, 즉 '미시-비판적 지정학'의 관점에서 대구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군주둔에 의한 지역사회 갈등과 이의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sup>2)</sup>.

## 2) 미군 주둔의 미시적 지정학

해방과 더불어 이 땅에 주둔하게 된 주한 미군의 역사는 이제 반세기를 훨씬 넘기게 되었다. 미국은 해당 지역의 안보와 세력균형 등을 명분으로 하거나 또는 실제 자국 이익의 확보를 위한 국제전략상의 이유로 현재 독일, 영국, 일본, 한국 등 세계 18개국 298개 기지에 자국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 태평양 순회함대와 군함을 포함하여 총 10만 여명의 병력을 배치시키고 있다. 그 동안 미군의 한국 주둔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이유, 즉 북한의 남침 저지와 (구)소련의 세력팽창을 억제하고자 하는 한미 양국간의 이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에도 주한 미군은 한국의 국가안보와 더불어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통한 동북아의 평화 유지의 필요성에 따른 미국의 세계정치 전략에 지대한 이바지를 하고 있다. 또한 향후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 지역의 세력 균형이라는 지정학적 이유로 상당 기간 미군주둔의 필요성이 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러시아 등의 주변국들에서도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국가안보와 안정 그리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세력 균형과 평화라는 거시-지정학적 명분으로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그 동안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유발한 것도 사실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거시적 지정학에서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일단 논외로 한다면, 미군의 주둔이 해당 지역사회에 미치는 미시-지정학적 영향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군 공여지로 인한 도시나 지역의 개발에 있어서 직·간접적인 제약과 더불어 미군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 범죄와 환경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주한 미군은 비록 거

시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국지적인 차원에서 보면 미군 주둔은 지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고 지역사회에 갈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거시적 측면에서 주한 미군이 담당하는 역할로 인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으나, 1990년대 이후 지역사회의 피해 주민들과 관련 시민단체들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피해 보상이나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고 나아가 주둔 미군의 철수 또는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그림 1>과 <표 1>은 주한 미군의 지정학적 관계를 거시적 및 미시적 차원으로 나타낸 것이다. 거시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미군 주둔 그 자체

의 문제는 우리 나라와 미국 양국 중앙정부간의 최고 수준의 정책결정 사항으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정치·군사적 상황논리에 의거하여 진행되어 왔다. 즉, 주한 미군은 자국의 군사외교적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한국의 국가안보와 한반도의 세력균형을 명분으로 주둔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중앙정부는 이러한 명분이 국가적 이해관계에 부응한다는 인식에서 일정한 방위비를 분담하면서 주한 미군의 지위에 관해 합의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사회에서는 이로 인한 범죄 발생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겪으면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나아가 미군기지의 이전 또는 철수를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는 중앙정부에게 미군 주둔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킨다고 할지라도 지역의 발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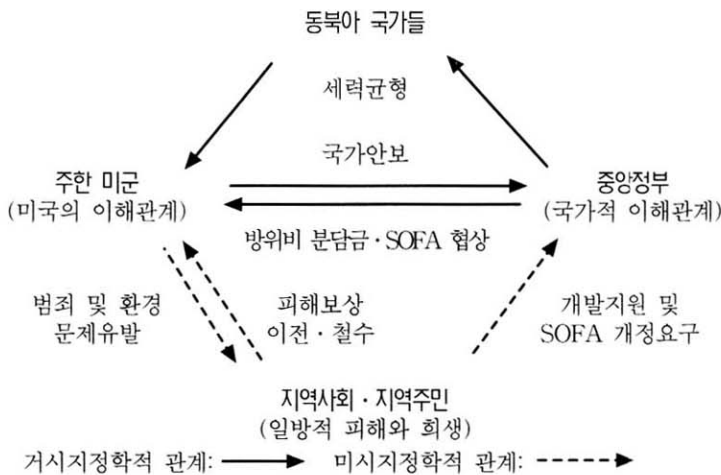


그림 1. 미군주둔의 거시 및 미시 지정학적 관계

표 1. 주한 미군의 거시 / 미시 지정학

구분	거시-지정학적 차원	미시-지정학적 차원
행위 주체	주둔 미군(미국)과 남·북한 정부당국 및 동북아 국가들	주둔 미군과 한국정부, 지역사회의 주민(피해주민 및 일반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주요 주제	전쟁억제, 세력균형, 패권	공여지 문제, 사회범죄, 환경오염, 생활불편과 악영향, 인권차별과 위화감
정치적 요구	국가안보 및 국제질서, 패권 유지를 위한 초강대국의 국제정치	피해보상 및 불편 해소, 차별 반대와 이를 위한 SOFA 개정 등을 위한 주민의 생활정치
공간적 범위	한반도, 동북아, 세계	미군주둔 도시 및 지역사회
대안·과제	미군 주둔/철수, 전투력 강화/완화	범죄예방, 지역발전 지원, 기지 이전·축소

지해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원 요구와 더불어 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미군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표 1>은 주한 미군과 관련된 거시적 및 미시적 지정학의 특성을 비교해서 요약한 것이다. 즉, 거시-지정학적 차원에서 보면, 행위 주체는 주둔 미군을 통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고자 하는 미국과 이러한 미군 주둔으로 인해 정치적인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남·북한 정부당국 및 동북아 국가들이다. 미군 주둔을 통해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적으로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한편, 남한은 미군 주둔을 통해 북한에 의한 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미국의 전쟁억제력의 우산 속에서 보호를 받기를 원하며,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동북아 국가들은 각각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전제로 주한미군을 통해 세력균형을 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정치적으로 요구되는 지정학적 목표는 국가안보와 국제질서, 패권 유지 등을 위한 초강대국들의 국제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시-지정학적 문제, 즉 남한의 정치·군사적 독립성 문제는 미군 주둔/철수, 전투력 강화/완화에 관한 논의로 이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요청되게 된다.

다른 한편, 미시-지정학적 차원에서 보면, 주한 미군과 한국정부와 더불어 각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해당 지역사회에서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과 일반 시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위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주체들에 의해 전개되는 미시-지정학적 문제는 미군과 기지시설로 인해 일반적으로 야기되는 공여지 문제와 사회범죄, 환경오염, 생활불편과 악영향(예로, 자녀교육), 인권차별이나 인종적 위화감 등을 포함한다. 기본적으로 미군이 주둔하는 도시 또는 지역사회에서 전개되는 미시-지정학은 피해보상 및 불편 해소, 차별반대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생활 정치를 지향하며, 그 결과로 범죄 예방대책의 마련,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역발전에 대한 지원 확보, 주한 미군으로부터 기지 이전 또는 축소를 대안적 과제로 설정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 거시적(국제적) 차원에서 미군 주

둔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미시적(지역적) 차원에서 미군주둔은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 나아가 국민 전체의 불만과 반감을 싸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안보와 동북아의 세력 균형을 위해 기여한다는 점에서 미군 주둔은 우리나라의 사회 전체 그리고 국토 전체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문제이지만, 실제 미군 주둔에 따른 각종 피해와 부담은 해당 지역사회에 집중적으로 전가된다. 즉 주한 미군의 유지를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 실제 미군 주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해당 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에만 과도하고 일방적으로 부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미군 주둔에 따른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해당 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미시적 정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미군 주둔이 비록 거시지정학적 측면에서 어떤 정당성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미시지정학적 측면에서 미군 주둔이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들을 유발한다면, 미군 주둔은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미군주둔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을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특히 미군주둔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범죄나 환경오염의 직·간접적인 피해자이며 또한 미군기지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의 발전 장애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전체 시민들이 나서서 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과 예방책에 대해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 역시 자신들이 대변해야 할 지역주민들의 권익과 피해 보상 그리고 지방재정의 기회 손실과 지역발전의 지해 등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3. 미군 주둔과 지역사회 문제

미군 주둔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각종 미군 범죄에 의한 피해, 미군 기지 주변(그리고 기지 내)의 환

경문제, 그리고 미군이 차지하고 있는 공여지로 인한 부작용 등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김동성 외, 2001). 대표적으로 2002년 발생했던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의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주한 미군에 의한 각종 범죄는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차별적 우월성으로 인해 전체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군 주둔과 활동에 따른 기지 내·외의 환경오염은 예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특히 1990년대 들어 시민환경단체들의 감시 감독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적발 빈도가 많아지면서,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은 미군 주둔과 관련된 핵심적 문제들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게 되었다.

또한 주둔 미군이 차지하고 있는 공여지는 토지 이용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 외 지역사회에서 사회문화적 갈등을 문제들로서, 미군 기지 주변 유흥가의 퇴폐적 풍속, 향락문화로 인한 청소년 교육환경의 저해, 미군기지 내 골프장 이용에 따른 위화감 조성, 미군 물품의 면세 특혜 및 불법 유통 등을 들 수 있다. 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사회에 피해와 부작용을 유발하면서, 기지주변의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 그리고 최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피해 보상이나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점차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본 논문에서는 특히 주둔 미군에 의한 범죄 문제와 미군 기지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를 보다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1) 주둔 미군에 의한 범죄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는 최근 언론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예민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정부 공식 통계상으로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군범죄의 발생건수는 한미행정협정(SOFA)가 발효된 1967년 이후 2001년에 이르기까지 총 5만여건으로 5만8천여명의 미군인이 관련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기간별 발생 추이를 보면 7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그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1990년대 후반에는 매년 500~60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미군에 의해 발생한 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의 비율은 1990년까지는 대체로 1% 미만이었으나 90년대 초반이후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범죄의 유형별로 보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는 대체로 감소하고 형량이 가벼운 경범죄의 상대적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군범죄에서 교통관련 범죄가 2001년 55.8%(1999년에는 7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99년 10월 이후 피해액 200만원 미만 물적 피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불입건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미군 범죄 발생건수가 200건 정도 감소하였고, 재판권 행사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미군에 의한 범죄는 발생건수가 비교적 적고 범죄의 유형도 대체로 경미한 것들이라는 점에서, 미군범죄는 흔히 인식되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는 일단 외국인에 의한 범죄라는 점에서 단순한 사회적 문제를 능가하여 민족

표 2. 기간별 미군범죄 발생 및 처리현황

구분	합계	67-71	72-76	77-81	82-86	87-91	92-96	97-2001	
범죄 발생	건수	51,406	8,778	10,678	9,634	8,953	6,138	4,057	3,168
	명수	58,416	10,267	12,670	10,949	9,749	6,708	4,567	3,506
재판권 행사	건수	490(1.0)	60(0.7)	86(0.8)	47(0.5)	36(0.4)	41(0.7)	100(2.5)	120(3.8)
	명수	678(1.2)	86(0.8)	143(1.1)	67(0.6)	49(0.5)	50(0.7)	131(2.9)	152(4.3)

주 : 1) 1980년은 계엄선포로 인해 미군 당국이 전속적으로 재판권 행사  
 2) 1999년 10월 이후 피해액 200만원 미만 물적 피해 교통사고는 불입건함에 따라 범죄 발생건수에서 제외됨.  
 3) 재판권 행사에서 ( )안은 %를 나타냄

자료: 법무부;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 <http://www.usacrime.or.kr>에서 재인용

적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 발생빈도나 범죄 유형과는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매우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실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대부분의 미군 범죄는 범죄 그 자체로서 한국인들에 대한 무시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처리과정에서 한국의 법적 지위 밖에서 불평등하게 정치적 및 사법적 특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반해, 미군인들에 의한 범죄에서 피해자인 한국인은 이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또한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나 관련자 처벌 등에 있어 불평등하며 오히려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압적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히 한국 법정이나 행정당국은 미국에 대한 일반적 관계를 우선 염두에 두고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거나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문제 처리와 미군과의 평등한 관계를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번번이 묵살당함으로써 악순환이 되풀이되기도 한다.

이러한 미군 범죄는 전체적으로 비록 발생건수가 적다고 할지라도,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기지가 주둔해 있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은 이를 보다 빈번하게 경험하게 된다. 예로, 대구 지역에서는 지난 2002년 8월말에서 9월초 1주일 정도에 미군 또는 미군속과 그 자녀들에 의해 범죄는 4건이나 발생했다<sup>3)</sup>. 이들은 미국인 학원강사 강간치상 사건(2002년 8월 25일), 미군 자녀에 의한 동네주민 폭행사건(2002년 8월 30일), 미군에 의한 슈퍼마켓 주인 폭행사건(2002년 8월 31일), 미군장교 성추행 사건(2002년 9월 2일) 등이다. 이러한 미군 관련 범죄는 한국여성에 대한 강간치상 또는 성추행 그리고 집단 폭행사건으로, 한국인에 대한 인권 유린과 일방적 가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특히 폭행사건의 경우, 한국 경찰은 피의자들을 미군측에게 신병을 인도해주는 것으로 처리를 끝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알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비록 미군범죄의 처리과정에서 정치적 및 법률적 불평등이 제도화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한국 경찰 및 검찰은 피해자들의 신고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미군 범죄를 방관하는 지나친 소극성과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군 피의자는 결국 한국 측의 처벌을 받지 않고 주한

미군 자체의 견책과 감봉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범죄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미군 범죄의 발생과 이러한 처리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지난 1990년대 이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점차 표출되기 시작했으며, 미군 주둔 나아가 미국에 대해 반대하는 민족적 감정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외국인에 의한 피해, 각종 범죄에서 나타나는 인권 유린, 그 처리과정에서 주한미군이 누려왔던 사법적 특권 등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특히 미군에 의한 범죄는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그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신병확보가 어렵고, 이로 인해 수사 및 재판, 형집행 등의 모든 단계에서 제약이 따랐다. 이로 인해 주한 미군에 의한 범죄는 일종의 성역이자 치외법권으로 인식되었고,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처벌을 요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되었다. 이러한 분노와 반발을 바탕으로 2001년 1월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에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들이 일부 수정되었다. 즉, 주한미군 범죄용의자에 대한 신병인도를 기소시점으로 앞당기고,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체포시부터 계속 구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압사 사고 및 그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주한 미군의 사법적 특권은 여전히 자행되고,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와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 2) 미군 기지에 의한 환경오염

미군 기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활동들에 의한 환경오염은 그동안 미군에 의한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시민환경단체들의 활발한 문제 폭로와 더불어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 문제는 지역사회(즉 미시적 측면)에서 미군 주둔과 관련된 핵심적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미군 기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들은 크게 3가지 유형, 즉 미군들의 사격(폭격)훈련이나 미군 항공기 및 헬기의 이착륙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공해, 오폐수 및 폐유 방출에 의한 하천



및 지하수의 수질오염, 그리고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와 이에 따른 토양 오염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유형의 환경오염들은 대부분의 미군기지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미군기지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환경오염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측정하거나 공식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고, 따라서 대표적으로 드러난 주요 환경오염 사건들을 중심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미군기지에 의한 소음공해는 의정부, 춘천, 평택(송탄), 군산, 대구 등 미군의 공군기지나 헬기 부대 또는 비행장이 있는 지역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군기지 주변에서 헬기의 이착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는 등가소음 71dB-88dB, 최고소음은 78dB-99dB에 달하며, 우리나라의 환경기준(낮 50dB, 밤 40dB)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음공해는 기지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수면장애, 혈압상승, 소화불량, 식욕감퇴, 집중력 저하 등의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고, 인근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진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항공기의 이착륙 시 엄청난 진동을 유발하며 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인근 주택의 지붕이나 담이 파손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미군기지에 의한 수질오염은 최근 시민단체나 언론으로부터 많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부적절한 정화시설로 인하여 기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무단 방출이나 기름이나 유해약품 등을 사용하고 난 후 발생하는 폐유와 유해폐기물의 불법 방출, 또는 골프장 농약 유출이나 송유관 파열 등으로 인한 기름 유출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여, 기지 주변의 하천이나 지하로 스며들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하천이나 지하수의 수질오염은 주변 하천이나 지하수를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기지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또한 농작물 재배와 자연환경 보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군기지 주변 토양오염은 폐수의 불법 방출 등으로 인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부대 내 적절한 처리 시설의 부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이나 폐건축 자재, 폐차량 또는 음식물 쓰레기의 불법투기 및 매립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방사능 물질이나 중독성 물질들을 가공·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들이나 이들 자체를 폐기처분해야 할 경우, 기지내 일정 장소에 매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은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지를 철수하고 난 이후에도 쉽게 노출되지 않다가 우발적으로나 또는 장기간에 걸쳐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환경문제들은 대구에 주둔한 미군기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신문기사 등에 의하면서, 대구 지역에서도 소음공해 및 토양오염과 관련하여 여러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로, 소음공해와 관련하여, 대구의 '캠프 워커' 헬기장 부근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 차○○씨는 수십년째 만성스트레스로 신경안정제의 힘을 빌어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헬기가 뜨고 내리면서 발생하는 소음공해, 강한 바람과 진동으로 인한 가옥균열, 장독 유리창파손, 통신장애, 난시청 등 크고 작은 정신적 피해가 잇따르면서 스트레스가 만성화돼 버렸기 때문이다. 토양오염의 사례로서, 2002년 8월 19일 미군 제20지원단 측이 남구청에 캠프워커 내 유류에 오염된 토양을 왜관(캠프캐롤)으로 옮기도록 승인해 달라는 요청으로 인해, 기지내 토양이 오염되었음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 동안 이러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미군기지에 대해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때로 강력한 시위를 하기도 했지만, 미군측에서는 대부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묵살해 왔다.

이와 같이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환경문제들에 대한 미군측의 무성의한 대응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단순한 시위를 통한 보상요구 및 책임자 처벌에서 나아가, 보다 제도적인 방법, 즉 법적 제재와 보상 청구로 이어지고 있다<sup>4)</sup>.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이러한 대책들은 최근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보다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고무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춘천시의회뿐만 아니라 인천시의회도 시민단체의 운동에 부응하여 부평미군기지 철수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한국 및 미국의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1월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통해 환경관련 조항을 강화하긴 했지만 협정 본문이 아니라 합의의사록에 수록하는 정도였고, 이로 인해 개정은 단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고 따라서 환경오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4. 미군 주둔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 의식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 특히 범죤 및 환경문제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사건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대구지역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1년 8월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전체 응답자수는 15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무응답자는 결측값으로 처리했으며 설문문항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응답자의 특성을, 남자가 47.6%, 여자가 52.4%로 각각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50~59세 사이가 다소 적지만 대체로 20%정도씩 차지하고 있다. 직업은 자영업 및 서비스종사자와 주부 등 기타 업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응답자의 직업별 특성에 따른 응답 내용 분석은 별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미군기지에서부터의 거리에 따른 응답자의 분포(즉 주거지의 위치)는 50m 이내 35명(23.8%), 50~100m 사이 26명(17.7%), 100~500m 사이 39명(26.5%), 500~1000m 사이 18명(12.2%) 그리고 1000m 이상이 28명(19.0%)으로, 이 특성은 응답 내용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sup>5)</sup>.

우선 미군기지 주변에서 살아가는 주민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미군기지로 인해 많은 불편(32.4%)을 느끼거나 또는 가끔 불편(30.4%)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을 느낌에 있어, 사회생활이 상대적으로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그리고 거주기간의 길수록 더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택의 위치가 미군기지에 가까울수록 불편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미군 기지에서 5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가운데 62.9%가 '많은 불편'을, 그리고 17.1%가 '가끔 불편'을 느끼는 반면, 500m이상 떨어져 있는 주민들 가운데 '많은 불편'을 느끼는 비중은 5~15%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대구지역에서 미군기지로 인해 개인적으로 불편을 겪은 경험에 관한 결과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예로, 춘천지역에 입지한 미군기지와 관련하여 춘천시민연대, 한림대 사회과학연구소, 한림학보사가 공동으로 2000년 6월 29~30일 사이 전화 통화를 통해 유효표본 264명에 대하여 수행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춘천지역 응답자들 가운데 약 30%는 불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와 비교하여, 대구지역의 응답자들 가운데 불편을 많이 또는 조금 느낀다는 비중(62.8%)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특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 보다 더 많이 불편을 경험하고 있으며, 미군기지 인접지역 주민들이 외곽지역 주민들에 비해 더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은 양 지역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미군기지로 인해 불편을 느끼는 구체적 내용으로는 대표적으로 소음·진동이 62.7%를 차지했고, 여타 환경문제(토양오염 등)가 13.5%를 차지했다(표 3). 그 다음으로 범죤로

표 3. 미군기지로 인해 느끼는 불편의 내용

구 분	합계	소음, 진동	여타 환경문제	범죤, 유흥업소	위화감	자녀교육	기타
전 체	129(100)	79 (62.7)	17 (13.5)	15 (11.9)	3 (2.4)	3 (2.4)	9 (7.1)
50m 이내	34 (100)	27 (79.4)	1 (2.9)	2 ( 5.9)	-	2 (5.9)	2 (5.9)
50-100m	22 (100)	19 (86.4)	-	2 ( 9.1)	-	-	1 (4.5)
100-500m	36 (100)	21 (58.3)	6 (16.7)	4 (11.1)	2 (5.6)	1 (2.8)	2 (5.6)
500-1000m	14 (100)	7 (50.0)	2 (14.3)	3 (21.4)	1 (7.1)	-	1 (7.1)
1000m이상	20 (100)	5 (25.0)	8 (13.5)	4 (20.0)	-	-	3 (15.0)

표 4. 주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구분	합계	아주 심각	조금 심각	보통	별로 심각하지 않음	전혀 심각하지 않음	5점 척도 점수
소음·진동	146 (100)	61 (41.8)	51 (34.9)	22 (15.1)	9 (6.2)	3 (2.1)	4.08
여타 환경문제	146 (100)	20 (13.7)	47 (32.2)	48 (32.9)	23 (15.8)	8 (5.5)	3.33
범죄	146 (100)	17 (11.6)	28 (19.2)	65 (44.5)	26 (17.8)	10 (6.8)	3.11
유해업소	145 (100)	20 (13.8)	30 (20.7)	52 (35.9)	33 (22.8)	10 (6.9)	3.12
위화감	145 (100)	21 (14.5)	27 (18.6)	49 (33.8)	37 (25.5)	11 (7.6)	3.07
자녀교육	140 (100)	29 (20.7)	32 (22.9)	43 (30.7)	30 (21.4)	6 (4.3)	3.34

주 : 5점 척도점수는 아주 심각=5, 조금 심각=4, 보통=3, 별로 심각하지 않음=2, 전혀 심각하지 않음=1 로 계산함

인한 불안감이나 유해업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11.9%로 나타났으며, 미군 및 관련 상황에서 생기는 위화감이나 자녀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각각 2.4%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 각각의 심각성 정도를 다시 조사해 보면,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느끼는 불편의 정도에 있어 '아주 심각'이 41.8%, '조금 심각'이 34.9%로,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76.7%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고 5점을 기준으로 한 척도점수가 4.08을 나타내었다(표 4). 그 다음으로 척도점수가 높은 사항은 자녀교육으로 여타 환경문제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소음·진동으로 인해 느끼는 불편은 무엇보다도 헬기 이착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표 5>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미군기지 주변 50m 이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80%가 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자주(60%) 또는 가끔(20%) 피해를 입고 있으며, 50-100m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88.4%가 자주 또는 가끔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환경문제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미군 측은 전혀(39.5%) 또는 별로(38.1%)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미비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대구의 미군기지에서도 한강의 독극물 방류사건과 같은 환경오염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아주(22.1%) 또는 다소(42.3%)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미군에 의한 범죄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6년 대구 지역에서 발생했던 미군인 그레고리 일병에 의한 살해사건과 그 외의 미군에 의해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약 절반 정도가 아주 잘 또는 조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 행위가 발생한 이후 미군 측의 조치는 거의(36.0%) 또는 전혀(41.9%)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미군 측에서 범죄발생에 대한 사후 처리 및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들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은 한국 정부가 보다 강력한 제재(47.6%)를 하거나 또는 SOFA를 개정(29.3%)해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표 6).

표 5. 헬기 이착륙으로 직접 소음 및 진동의 피해 사례

구분	합계	자주 있음	몇 번 있음	그저 그렇다	거의 없음	전혀 없음
합계	146 (100)	48 (32.9)	37 (25.3)	13 (8.9)	27 (18.5)	21 (14.4)
50m 이내	35 (100)	21 (60.0)	7 (20.0)	2 (5.7)	2 (5.7)	3 (8.6)
50-100m	26 (100)	14 (53.8)	9 (34.6)	1 (3.8)	1 (3.8)	1 (3.8)
100-500m	39 (100)	9 (23.1)	12 (30.8)	3 (7.7)	12 (30.8)	3 (7.7)
500-1000m	18 (100)	2 (11.1)	5 (27.8)	6 (33.3)	3 (16.7)	2 (11.1)
1000m 이상	28 (100)	2 (7.1)	4 (14.3)	1 (3.6)	9 (32.1)	12 (42.9)

표 6. 미군 범죄 해결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조치

구분	합계	한국정부의 보다 강력한 제재	미군 자체내 범죄 억제 교육 강화	언론 및 시민 단체의 적극 개입	SOFA 개정	기타
응답자 수	147	70	16	12	43	6
구성비 (%)	100	47.6	10.9	8.2	29.3	4.1

### 5. 미군 주둔과 지역사회 문제의 해소 방안

미군기지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환경문제는 자국민들 간에 발생하는 경우와는 달리 외국 군인들에 의해 유발되는 우리 국민의 피해 또는 국토의 오염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고 민감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김동성의, 2001). 특히 이러한 문제의 발생에 대한 관련자 처벌이나 대책의 마련에서 지역주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완전히 배제되고 있으며, 반면 미군측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 근거하여 우월한 지위를 노골적으로 행사하면서 실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우리 나라의 중앙정부 역시 이러한 차별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소극적이고 현상유지적인 문제 접근으로 인해,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미군기지가 입지해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나서서 중앙정부 및 미군 측에 대해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아가 미군의 철수를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주한미군 나아가 미국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는 어떤 감정적 대응에 기초하기보다 좀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논리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거시 지정학적 측면에서 남한에 미군 주둔의 필요성 또는 정당성은 아직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미군기지가 소재하는 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다. 거시적 측면에서 아무리 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미시적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주민이나 지방정부가 이로 인해 엄청난 부담을 전가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피해와 부담은 장기적으로 미

군의 완전 철수에 의해서 해결되겠지만, 미군 철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와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해 원만하게 대처하고 예방함으로써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시적 차원에서 거시적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몇 가지 대응 전략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지역사회에서 즉각적인 대처 전략: 이러한 점에서, 첫째 지역사회에서 미군기지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범죄와 환경문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진상조사 및 대책과 예방책을 미군측에 즉각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sup>6)</sup>. 우선,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한·미간 초동단계 수사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2001년 개정된 SOFA의 규정에 의하면, 한·미 양측은 미군관련 사건 발생시 초동단계에서부터 상호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의 경우, 대구의 캠프워커 내 유류에 의한 토양 오염처럼, 기지 내에서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미군관련 사건 발생시 명확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진상 규명에 근거하여, 발생한 문제의 관련자 처벌, 책임자 사과 및 철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미군기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미군 부대 간 상설 협의체가 신설되어야 한다<sup>7)</sup>.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미군기지와 관할 지자체간 원활하고 신속한 협의와 정보교환 및 대응책 모색을 위한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의체는 기지내 및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훈련 및 부대이동 계획을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통보해 주고, 미군이 훈련 등으로 사용하는 도로 및 시설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

가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 사항을 일반 범죄 및 환경오염 사범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우범지대 등에 대하여 미군과 지자체가 함께 감시·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만약 문제 발생이 우려될 경우 이를 공동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지역협의체는 미군기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한 대책이나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주민과 주둔 미군간의 활발한 교류 및 지역문화 행사의 공동 개최 등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데도 기여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대책과 예방을 위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특별대책기구 또는 미군기지 전담기구(부서)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은 물론이고 광역자치단체도 역시 주한미군 관련 정책수립이나 주한미군과의 공식적인 관계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지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미군기지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한미군 관련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관련 조례와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는 해당 지역의 주한미군 관련 정책의 기획과 수립, 지원과 조정, 주둔현황 파악 및 통계 정리, 미군과 미군기지로 인한 각종 문제의 조사 및 분석과 대책 수립, 공여지 반환 및 활용, 한미행정협정 개정 추진, 미군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민원 사항의 접수 및 처리, 주한미군 및 관련단체 연락 업무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문제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 문제만을 전담하는 시민단체 또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지역사회단체들의 연합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②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 그 동안 중앙정부는 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미주둔군지위(SOFA)협정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해 왔지만, 2001년 1월에 개정된 현행 협정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우선 범죄처리와 관련된 재판권의 행사와 관련된 규정들은

여전히 매우 불평등한 관계를 내포하고 있지만, 일반 범죄에 대한 법적 불평등의 문제들<sup>8)</sup>을 일단 제쳐놓고라도, 환경문제와 관련된 불평등의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즉, 현행 SOFA에는 미군기지 내 및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환경오염의 발생에 대한 처벌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은 매우 불명확한 상태로 되어 있다. 다만 2001년 개정작업에서는 본문이 아닌 합의의사록에 환경문제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선언적 규정만을 포함시키는데 그쳤다. 즉, 협정 본문이 아니라 합의의사록에,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상호 인정”하고 “미국은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삽입되었다. 또한 특별양해각서에 환경관련 정보공유 및 공동조사를 위한 우리 정부 관계관의 미군기지 출입절차를 마련하고, 미국측은 미군 환경관리지침을 매 2년마다 또는 수시로 검토·보완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환경관리실적을 평가하고 주요 오염을 제거(혹은 치유)하는 노력을 펼친다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의 추가에 따라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또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기지 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 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고 실제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의 이전이나 철수 시에 원상 회복의 의무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기지내의 토양이나 지하수 등을 오염시키더라도 장·단기적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으며, 환경이 오염된 기지와 시설 문제는 추후 계속되는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점들에서 한미행정협정의 추가적인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최근 미군기지 내 및 주변의 환경문제를 둘러싼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미군측과 몇 가지 사항에서 합의를 했으나, 아직 SOFA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형사재판권, 시설 및 구역의 이용 및 환경문제 등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 SOFA의 개정은 기본 원칙상, 상호성, 호혜성, 평등성, 주권회복 등의 4대 방향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배려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전

제로 미군의 범죄에 대한 공평하고 단호한 대처 방안, 그리고 미군기지와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공해 및 토양과 수질 오염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 및 방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에 대해 원상복구나 피해 보상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③ 미군기지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이러한 SOFA 개정과 더불어, 중앙정부는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와 부담을 전가 받고 있는 해당 지역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미군주둔의 명분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안보는 우리나라 전체 지역들의 공통적인 이해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각종 피해와 희생에 대해서는 공평한 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미군 주둔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입고 있는 손실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 따라야 하며,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미군주둔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 2001년 10월 미군기지가 있는 15개 자치단체장의 협의회가 미군 주둔 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할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보호와 SOFA 개정 등을 의도하는 미군기지특별법을 발의하였으며, 2002년 10월에는 의원입법으로 제출되었지만 아직 입법화되지 않고 있다. '미군 공여지역 지원 및 주민권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미군에 대한 공여지 제공과 반환, 미군 공여지로 인한 지자체의 손실 보전, 그리고 미군 공여지역 발전계획 및 주민 피해구제 관련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한국이 미국과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문제들을 협의할 경우 한국이 준수해야 하는 국내법적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불평등한 현행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가진다. 즉, 한국 정부는 미국과 미군주둔과 관련된 문제들을 토의함에 있어 국내법에 의거해 수립한 의견들을 미국에 제시함으로써 협상력을 더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영역 내에 배치된 미국 군대에 대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및 반환, 미군 공여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의 손실 보전, 미군 공여지

역 발전계획 및 주민 피해구제 관련사항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해당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 권익을 보호할 것임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sup>9)</sup>. 이 법안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오랫동안 피해를 받아 온 지자체의 지역발전에 대한 지원 및 지역주민들과 지역환경의 보호를 입법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규정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미군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피해보상, 미군공여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및 반환 절차 마련, 미군기지주변의 환경조사 및 평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섭권 강화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미군주둔 각 지역사회가 현실적으로 매우 시급히 개선되기를 원하는 것들로서, 향후 법률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④ 미군기지의 단계적 철수: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물론 기지의 철수라고 할 수 있다. 거시-지정학적 측면에서 미군의 철수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체로 미군 철수가 남북한의 긴장고조와 동북아지역에서 힘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대체로 국민 다수의 공감대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군기지 주변의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많은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군기지의 철수 또는 이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 가운데 미군기지가 이전·반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80%를 능가하고 있다(표 7). 이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특성과 관련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미군기지에 가까이 살고 있을수록, 반드시 이전 또는 반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전 또는 반환에 대한 이러한 찬성 의사의 비율은 춘천지역의 미군기지에 관한 조사에서 나타난 것, 즉 찬성 68.3%, 반대 5.0% 보다도 높은 것이다. 양 지역을 비교해 보면, 응답자의 특성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이 비해, 그리고 인접지역이

표 7. 미군기지의 이전 또는 반환에 관하여

구 분	합계	반드시 이전· 반환되어야 함	이전·반환 되어야 함	그대로 있어도 상관없음	반드시 있어야 함	관심 없음
전 체	147 (100)	71 (48.3)	49 (33.3)	21 (14.3)	1 (0.7)	5 (3.4)
50m 이내	35 (100)	23 (65.7)	6 (17.1)	5 (14.3)	-	1 (2.9)
50-100m	26 (100)	16 (61.5)	5 (19.2)	3 (11.5)	-	2 (7.7)
100-500m	40 (100)	18 (45.0)	19 (47.5)	2 ( 5.0)	-	1 (2.5)
500-1000m	18 (100)	6 (33.3)	8 (44.4)	4 (22.2)	-	-
1000m이상	28 (100)	8 (28.6)	11 (39.3)	7 (25.0)	1 (3.6)	1 (3.6)

외곽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공통된 사항이다.

대구지역에서 특히 미군기지의 이전 또는 반환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찬성율이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 심각한 소음·진동을 유발하는 헬기장의 이전 때문이다.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극소수(2.1%)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헬기장의 이전에 대해 적극(56.1%) 또는 다소(27.0%)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미군기지의 이전 또는 반환에 대해 지역사회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sup>10)</sup>은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이 그만큼 심각함을 뜻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비록 거시지정학적 입장에서 미군 주둔의 당위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역사회의 미시지정학적 관점에서 미군기지의 철수는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미군기지에 대해 무조건 철수를 요구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자립적 의사결정과 이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국내외 정치지리적 조건들을 성숙시키고,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미군이 철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6. 결론

최근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및 이라크의 침공 그리고 북한 핵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주한 미군 문제가 사회적 논의의 주요 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 주제는 세계정치에서 미국의 패권주의 또는 신제국주의적 전략에 관한 거시-지정학적 논의를 부활시키고 있다(Havey, 2003), 또한 이러한 거시-지정학적 논의를 배경으로, 지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SOFA 개정 및 미군철수 그리고 전쟁

반대를 주장하는 미시-지정학적 논의들도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 특히 후자의 논의는 미군주둔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특히 범죄와 환경오염 문제들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불편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저해하는 여러 요소들에 대한 일반 시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손실과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고 하겠다.

이러한 거시 및 미시-지정학은 현실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학문분야에서도 최근 새롭게 관심을 촉구하면서 부활하고 있다. 자본의 세계화 과정과 직·간접적 관계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세계정치 질서의 재편은 거시-지정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으며, 반면 세계정치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과 더불어 세계정치를 배경으로 발생하는 지역적 정치에 관한 탈구조주의적 이해의 결합은 새로운 미시-지정학을 등장시켰다. 특히 미시적 지정학은 국지적 공간의 점유를 둘러싸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저항의 지형'에 참여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그 대안을 찾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지역사회에서 미군기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일상적 갈등과 저항운동은 이러한 미시적 지정학의 전형적인 연구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그 동안 미군기지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들의 가시화는 거시-지정학적 관점에서 국가안보와 동북아 평화를 명분으로 억제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억압해 온 독재정권이 물러나고 점차 통치체제가 민주화되면서 시민사회의 정치적 담론이 활성화되고 지역사회단체들의 역할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의 실태가 명확히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예방책에 대한 요구가 활발하게 개진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환경오염문제 그리고 공역지 관련문제 등이 주요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미군주둔이 국가안보와 동북아 평화라는 거시-지정학적 명분 하에 이에 의한 피해와 부담의 대부분이 미군기지가 소재하는 지역사회에 집중적으로 전가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거시-지정학적 관점에서 모호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김대중정권이나 이를 이어받은 현정권도 미시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무시하거나 심지어 억누르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그 피해와 부담을 전가받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실천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달리 말해, 미군기지 주변의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단체들 그리고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가 미군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와 환경오염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미시-지정학적 관점에서 매우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註

- 1) 보다 정확하게 말해, 새로운 비판적 지정학의 방법론은 푸코에게 가장 우선된 영향을 받았다면, 다음으로 급진지리학(비판적 및 맥락적 접근을 강조하는)의 영향을 받았다(Smith, 2000). 그러나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닐 스미스(N. Smith)는 이러한 비판적 지정학의 의의를 한편으로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 2) 미국의 해의 정책에 관한 새로운 지정학적 연구로 Agnew(1983) 및 O'Tuathail and Agnew(1992) 등 참조.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미국의 해외정책에서 지정학적 추론에 기초한 담론의 역할에 관심을 두고 있다.
- 3)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미군 범죄 사건과 환경오염 문제는 미군기지피해찾기 대구시민모임(<http://www.nousbases.org>)의 자료실과 신문 자료에서 발췌, 요약한 것임을 밝힌다.
- 4) 예로, 2002년 8월 춘천시의회와 시민단체는 미군헬기소음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시의회와 시민단체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된 주민설명

- 회를 가졌으며, 소송대리인 역할을 담당한 변호사가 참석하여 소송 절차와 사전 준비 자료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강원일보, 2002.09.11).
- 5) 설문의 내용은 크게 3가지 분야, 즉 미군기지가 주민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군기지의 철수 및 이전과 관련된 의식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들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미군기지 철수 이후의 후적지 이용 등에 관해서는 다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 6) 이러한 대책은 2002년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외교통상부가 제시한 몇가지 주요 사항들에 상당 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주한미군 나아가 미국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외교통상부는 주한 미군 관련 사건을 철저히 예방하고 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몇가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반영한 SOFA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7)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민군관계분과위원회가 1971년 9월 SOFA 합동위를 통해서 비상설 분과위원회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2002년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동 분과위를 활성화하여 각종 미군관련 사고예방과 사후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는 상설 협의기구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 8) 1966년 처음 마련된 한미행정협정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법무부장관이 적극적인 재판권행사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이는 자동적으로 한국측 재판권의 포기로 간주한다는 조항이었다(제 22조 3항). 아울러 형사판할권 적용대상 범위 및 신병인도 시기(제 22조 5항), 미군피의자에 대한 특혜(제 22조 9항) 등이 불평등하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1991년 개정으로 자동적인 재판포기 조항은 폐지되었으며, 2001년 개정된 내용은 미군범죄자의 신병인도시기가 재판절차가 완료된 시점에서 기소된 시점으로 앞당겨졌다는 점에서 다소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9) 예로, 이 법안은 미군기지 주변 환경조사 및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소위원회와 환경분과를 설치하고 환경부 장관 및 자치단체장이 미군시설에 대한 정기조사나 긴급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군시설의 설치 및 증설계획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요구와 환경오염 발생시 미군에 환경복구 요청 및 국가의 주민피해 보상을 의무화했다.
  - 10) 그러나 헬기장이 완전히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대구지역 내 동촌이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헬기장의 이전에 대해서는 83.1%가 찬성하지만, 이러한 이전이 지역 내에 이루어지더라도 찬성하는 비율은 64.4%로 약 20% 정도 줄어들고 있다.



文 獻

- 김동성, 양기용, 강혜정, 2001,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통합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1-10)
- 김용한, 2002, 아시아주둔 미군과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 [http://www.peacekorea.org /databank/yonghan2.html](http://www.peacekorea.org/databank/yonghan2.html).
- 김중석, 권은비, 정육진, 경기도내 미군기주변 토양오염도 조사, 대한환경공학회, 2002 춘계학술연구발표회 논문집(II), 3-4.
- 이대회, 2002, 현대 프랑스 지정학 연구: 정치학 방법으로서의 모색, 한국프랑스학논집, 40, 453-478.
- 이영형, 1997, 지정학 연구의 현대적 의미, 한국정치학회 1997년도 연례학술대회 발표문.
- 임덕순, 지정학, 1999, 법문사.
- 최병두, 2002a, 현대사회지리학, 한울.
- 최병두, 200b, 세계화와 초테러리즘의 지정학, 당대 비평 (봄호); 최병두, 2000c, 근대적 공간의 한계, 삼인, 285-316 재계재.
- 최승환, 1997,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서울국제법연구, 4(2), 83-120.
- Agnew, J., 1983, An excess of national exceptionalism: towards a new political geography of American foreign policy, *Political Geogrpahy Quaterly*, 2, 151-166.
- Agnew, J., 1998, *Geopolitics*, Routledge, London.
- Dalby S., 1992, Critical geopolitics: discourse, difference and dissent,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9, 261-283.
- Dodds, K., 2000, *Geopolitics in A Changing World*, Longman, Harlow.
- Dodds, K., 2001, Political geography III: critical geopolitics after ten year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5(3), 469-484.
- Dodds, K. and Sidaway, J., 1994, Locating critical geopolitics, *Environment and Planning A: Society and Space*, 12, 515-524.
- Harvey, D., 2003, *The New Imperialism* (미간행)
- OTuathail, G., 1996, *Critical Geopolitics*, Routledge, London.
- OTuathail, G., 2000, The postmodern geopolitical condition: states, statecraft and security in the millennium,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0, 166-178.
- OTuathail, G. and Agnew, J., 1992, Geopolitics and discoure: practical geopolitical reasoning in American foreign policy, *Political Geography*, 11, 190-204.
- Reuber, P., 2000, Conflict studies and critical geopolitics - theoretical concepts and recent research in political geography, *GeoJournal*, 50, 37-43.
- Routledge, P., 1996, Critical geopolitics and terrains of resistance, *Political Geography*, 15 (6/7), 509-531.
- Slater, D., 1999, Situating geopolitical representations: inside/outside and the power of imperial interventions, in Massey, D. Allen, J., and Sarre, P. (eds), *Human Geography Today*, Polity, Cambridge, 62-84.
- Smith, N., 2000, Is a critical geopolitics possible? Foucault, class and the vision thing, *Political Geography*, 19(3), 365-371.

(접수 : 2003. 6. 25, 채택 : 2003. 7. 22)